<도전'93 :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불황카르텔의 모순들(II)

석유화학 산업계가 PE와 PP 2개 품목의 불황카르텔 결성에 합의했다고 한다.
유공·대림산업 등 11개 석유화학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10월12일 에틸렌 및 프로필렌을 제외한 폴리올레핀 부문의 불황카르텔을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합의내용을 보면, 가격은 국제가에 연동하고, 물량은 각 생산기업의 생산능력 및 시장점유율을 감안,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황카르텔 결성 합의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극도의 불황에 빠져 생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공부의 개입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다음 몇가지 점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국내 석유화학 산업 불황의 근원은 국내외 수요 위축보다는 부분별한 투자와 이로 인한 극심한 공급과잉, 가격폭락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은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내수 및 수출 확대에 있다. 수출은 동남아 및 중국시장을 주름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수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폭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및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황의 늪을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며, 현재와 같은 증가율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내수 및 수출상태를 점검해 볼 때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가 현재의 공급과잉을 해소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딱 한가지, 공급을 줄이는 길 이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산업계 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에는 별 언급이 없고 오직 가격인상에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합의 내용 중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을 감안해 공급물량을 조정한다고 돼 있으나, 이 문구는 불황카르텔 형성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일 뿐 전혀 실천성이 없는 허구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회의에 참석한 기업 대표 중 가동률 조정에 찬성을 표시한 대표는 2~3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동률 조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공급가격만을 담합해 채산성을 개선시키고자 불황카르텔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급을 대폭 줄이지 않고서 가격을 인상하는 인위적 방법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결코 수요처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과 같은 두리뭉실한 문구를 가지고서는 공급량 조절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논리는 설득력을 갖게 마련이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실 생산능력은 공칭 생산능력보다 30~50%는 넘고 있다. 이는 공장 건설 당시 여유분을 갖는 외에 리벰핑과 기술진보로 생산수율을 높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능력의 기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문구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기초 유분의 생산 및 수출·수입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이다.
애초 대림산업과 유공은 기초유분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지간 거래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호남석유화학 등이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유분의 수급조정없이 폴리머의 공급과 가격만 조정했을 경우 대림산업 같은 기초유분 소요처가 없는 기업의 타격은 불을 본 듯하고, 결국 카르텔의 지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본지에서는 NCC의 가동률을 15~20% 줄여 기초유분 공급량을 줄이면서 기초유분 수입을 일시적으로 규제, 폴리머 공장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수차에 걸쳐 제시해 왔다. 이 방안은 나프타 및 LPG 등 기초원료의 수급통제로도 가능하고, NCC의 가동을 체크하기가 쉽다는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불황카르텔보다는 나프타의 공급 및 수입을 통제, NCC 가동률을 낮추고 여기에서 폴리머 생산을 감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불황카르텔은 특정 산업집단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특혜를 주는 조치로 논의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 주지시키고 싶다. 국민적 합의없는 특혜는 불공평문제와 아울러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프나 수급조절을 통한 NCC 가동률 조정, 폴리머 감산이 최선책이라는 점 강조해 둔다.

<화학저널 1993/10/18>